

2023년 5월 6일 시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Ⅱ)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공개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15:00 이후
2. 정답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알립니다』에 게시
3. 이의제기 기간 /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외에도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실시계획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ㄷ. 국가정보원장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과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력자원에 포함된다.
- ㄴ.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은 인력자원에 포함된다.
- ㄷ.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물적자원에 포함된다.
- ㄹ.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인력자원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②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 ③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대통령 소속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전국에 걸쳐서 비상대비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후의 훈련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도지사는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 ②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甲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되어야 한다.
- ③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乙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사전에 직접 교부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가족 중 다른 성년자 丙에게 교부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丁에게 교부할 수 있다.
- ④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戊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되는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도상훈련의 훈련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ㄴ.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 ㄷ.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한 경우,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ㄹ. 훈련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비상대비훈련에 우선한다.
- ②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비상대비훈련(동시관리훈련은 제외한다)에 우선한다.
- ③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은 비상대비훈련에 우선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 ②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비상대비훈련으로 훼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실된 경우에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③ 비상대비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甲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시설보강의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용자 乙이 그의 피용자 丙에게 비상대비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비상대비훈련실시명령의 발령으로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였던 戊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외교부장관, 소방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장은 모두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는 연 2회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비상회의가 있다.
- ㄷ. 분과위원회는 소관 민방위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ㄹ.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과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항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집행 계획 및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한다.
- ㄷ. 교육감이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ㄹ. 유역환경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 및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군부대의 장은 민방위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긴급히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구두로 전달하는 동원 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문 21.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하되,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된 경우, 민방위대의 대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편성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민방위대를 편성하며,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도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황은 민방위사태에 해당한다.
 ㄴ.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ㄷ. 관공서·공공기관 및 국가보안시설의 옥외에 설치된 출입구등을 비롯한 문전등의 경계관제 방법은 차광이다.
 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제외한다.
 ㄴ.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생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ㄷ.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ㄹ.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데, 산업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입학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ㅁ.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만,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할 수 있는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상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재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③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④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민방위 대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A직장의 장은 총 예비군자원 10명 중 2명이 외국에 체류 중임이 이유로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동·읍·면 단위에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로 편성할 수 있다.
- ③ 같은 건물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3개월 동안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근예비군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로 선발한다.
- ④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개인 사정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②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할 수 있다.
- ④ 무장 소요(騷擾)가 있는 지역에서 중요시설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중요시설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탁경찰서장은 무장공비가 은신하고 있는 A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A지역 주민들에게 소개(疏開) 명령을 발동하고,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甲 소유의 입목 20그루(시가 200만원)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 ① 수탁경찰서장이 소개(疏開) 명령 등의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경찰서장은 입목 20그루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甲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입목 20그루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甲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입목의 제거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경찰서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복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특수복 중 근무복은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하되,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예비군대원이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남녀 모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 ③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를 9월 20일에도 착용할 수 있다.
- ④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예비군대원도 예비군표 지장 중 휘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에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甲은 부상으로 인하여 5개월 동안 생업인 슈퍼마켓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 甲은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년 6개월 뒤에 해당 상이(傷痍) 후 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① 사망한 甲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甲에게 지급하는 휴업 보상금의 금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甲의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하고,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 3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충청남도 X시 지역에 동원명령이 발동되어 X시 지역에 거주하던 예비군대원 甲과 乙도 동원이 되었다.

- (1)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 (2) 예비군대원 乙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 <보 기> —

- ㄱ. 예비군대원인 甲은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군(軍)의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 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용을 민간의료시설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ㄷ. 乙과 관련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乙의 유족이 보상 대상자가 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乙에 대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형법」상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은 소속 예비군대원 X를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Y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7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2023년 4월 7일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 ④ 동원된 예비군대원 Z뿐만 아니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丁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문 36. 「예비군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벌칙이 일치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에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ㄴ. 동원된 예비군대원이 무장공비와 교전 중에 분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ㄷ.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대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ㄹ. 예비군의 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ㅁ.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문 37.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된다.
- ② 지역방위협의회 위원은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전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 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도 포함된다.
- ㄷ.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 ㄹ.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사업평가 및 성과지표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고르면?

- ①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②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④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 ③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④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수습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수습지원단의 업무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 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포함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남아시아 A국에서 댐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甲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마침 현지 재난지역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 乙의 생사확인이 불명하여 정부차원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보 기> —

- ㄱ. 이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ㄴ. 甲은 즉시 위 상황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ㄷ.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ㄹ. 乙의 며느리 丙은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도 외교부장관에게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포한 재난사태인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한 재난사태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나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지역에 강력한 대설 및 한파로 인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생긴 재난이 발생하였다.

— <보 기> —

-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B지역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ㄷ. 중앙대책본부장이 B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ㄹ.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A시의 시장은 A시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ㅁ.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복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복구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재정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지역의 화재로 인하여 국가 또는 A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 <보 기> —

- ㄱ. A시장이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지역 주민 甲에게 대피하도록 명령을 한 경우 甲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A시는 보상하여야 한다.
- ㄴ. A시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乙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하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ㄷ. A시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丙에게 신속한 구호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丙의 피해 물량 등에 대한 신고 없이도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ㄹ. A시는 세입자가 아닌 지역주민 丁에게 행정착오로 인하여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丁이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ㅁ. B지역에 대해서 국가는 재난복구사업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ㄹ, ㅁ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의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고,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ㄹ.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즉시 문제 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